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

- 2023년도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 출연 계획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2. 9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세 무 과]

- 2023년도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 출연 계획안 -

# 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세 무 과 장

2023년도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☐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 출연 계획안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☐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의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자주재원의 확충,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의 연구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
-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

☐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의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,

-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의 선진화와 재정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연구로 입법지원과 지방세제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

- 세무공무원의 전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 협력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**□ 우리구가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,**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(2021년도) 보통세 세입결산액 1,403억 5,756만 5,000원의 1만분의 1.2에 해당하는 1,684만 3,000원입니다.

※ 출연금 산출 내역 : 140,357,565천원(결산액) × 1.2/10,000 = 16,843천원

**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**

- 이번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에 대한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출연금으로서,
-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**□ 감사합니다.**

#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00922034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9. 30.

제출자: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 
(세무과장)

## 1. 제안이유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: 16,843천원
  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
  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을 출연

## 3. 출연 심의 요구서: 붙임

## 4. 참고자료

- 가.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예산
- 나. 연구원 이사회 명단 및 임기
- 다. 연구사업 추진 현황 및 2023년 추진 방향
- 라.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2023년 추진 방향
- 마. 관계법령



# 출연 심의 요구서

출연대상	<div>○ 기 관 명: 한국지방세연구원 (원장 : 배 진 환)</div> <div>○ 일반현황: (소재지)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(현원/정원) 69명/92명 (주요사업)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</div>																				
출 연 사 업 비	<div>○ 출연 예정금액: 16,843천원</div> <div>○ 예산편성 요구 사항 (단위: 천원)</div>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사업 기간</th><th rowspan="2">2022년 예산액</th><th rowspan="2">2023년 요구액</th><th colspan="4">재원별</th></tr><tr><th>계</th><th>국비</th><th>시비</th><th>구비</th></tr><tr><td>우리구 출연금</td><td>1년</td><td>16,774</td><td>16,843</td><td>16,843</td><td></td><td></td><td>16,843</td></tr></table> <div>※ 2022년 우리구 출연액 비중은 전국 112억원 중 0.15% 차지</div> <div>○ 산출근거 2021년 보통세 결산액(140,357,565천원) × 1.2/10,000(출연율) = 16,843천원</div> <div>출연율 : '20년 (1만분의 1.5) → '21년 (1만분의 1.3) → '22년이후 (1만분의 1.2)</div>	구 분	사업 기간	2022년 예산액	2023년 요구액	재원별				계	국비	시비	구비	우리구 출연금	1년	16,774	16,843	16,843			16,843
구 분	사업 기간					2022년 예산액	2023년 요구액	재원별													
		계	국비	시비	구비																
우리구 출연금	1년	16,774	16,843	16,843			16,843														
출 연 필 요 성	<div>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.</div>																				
근거 법령	<div>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, 제152조</div> <div>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</div>																				
부서의견	<div>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</div> <div>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</div> <div>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</div>																				

## 참고 (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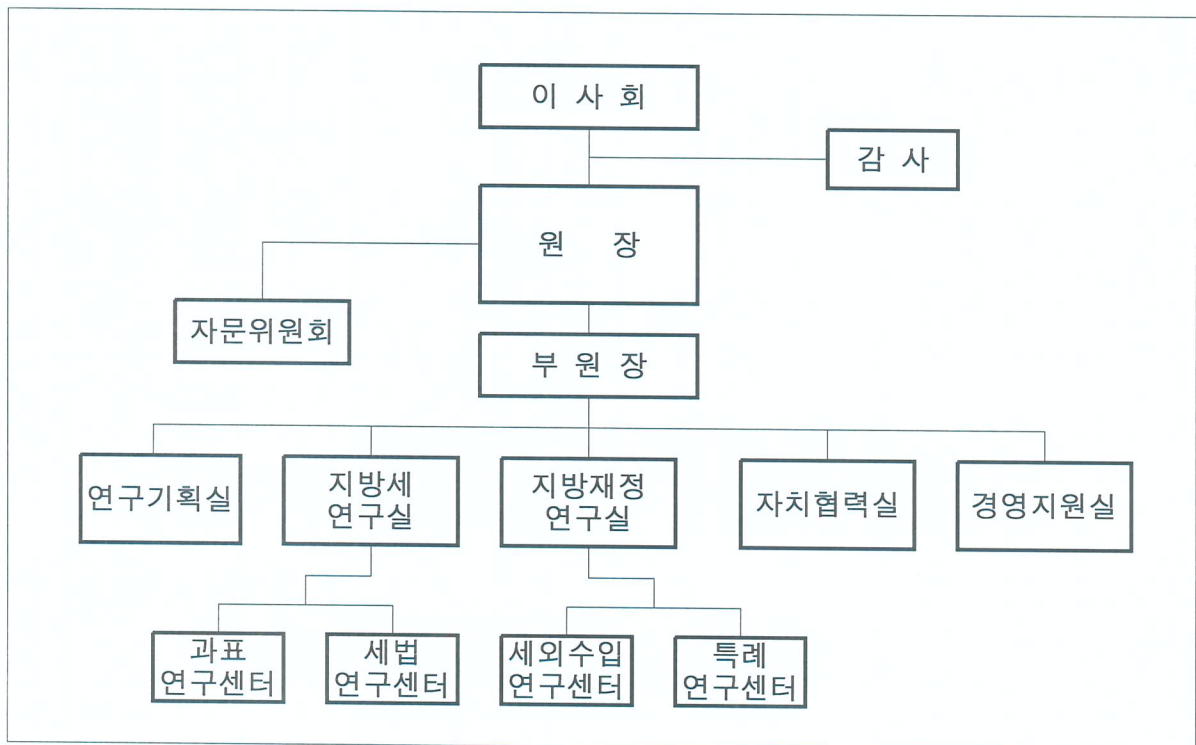
##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예산

○ 총 인원 : 85명

(2022.8월 기준)

구 분	계	원장	부원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사무직	시설 관리직
정 원	92	1	1	57	2	6	23	2
현 원	69	1	1	45	0	3	18	1
총인원	85	정원외 인원 16명 (파견공무원 등)						

○ 조직 : 5실 4센터



○ 2022년 예산 : 142억원

(단위 : 억원)

수 입		지 출			
출연금	기타 등	인건비	사업비	경상경비	시설비 등
111.6 (79%)	30.4 (21%)	74.4 (52%)	56.8 (40%)	9.0 (6%)	1.8 (2%)

※ (참고) 국세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2년 총 예산액은 480억원 규모임.

○ 2022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출연금 (A+B)	광역단체 (A)	기초단체			
			소계 (B)	시	군	구
합 계	11,160,552	7,512,632	3,647,920	2,362,494	420,291	865,135
서울	2,814,646	2,368,712	445,934	-	-	445,934
부산	675,181	539,658	135,523	-	17,952	117,571
대구	433,061	338,181	94,880	-	24,925	69,955
인천	560,473	442,159	118,314	-	7,775	110,539
광주	249,040	207,835	41,205	-	-	41,205
대전	247,041	202,310	44,731	-	-	44,731
울산	226,688	159,014	67,674	-	32,474	35,200
세종	87,319	87,319	-	-	-	-
경기	2,801,254	1,435,329	1,365,925	1,342,417	23,508	-
강원	290,272	166,856	123,416	86,773	36,643	-
충북	304,634	158,896	145,738	99,017	46,721	-
충남	449,235	234,744	214,491	176,423	38,068	-
전북	324,178	181,289	142,889	111,449	31,440	-
전남	393,659	222,787	170,872	102,836	68,036	-
경북	498,387	253,565	244,822	194,753	50,069	-
경남	628,724	337,218	291,506	248,826	42,680	-
제주	176,760	176,760	-	-	-	-



## 참고 (나)

## 연구원 이사회 명단 및 임기

설립근거	「지방세기본법」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			전화번호 : 02-2071-2789
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		기관형태	출연
인원현황 (2022년 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임시직·파견
	85명		69명 (원장, 부원장, 연구위원, 관리직, 사무직 등)	16명 (파견공무원 등)
임원 (2022년 8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	주요경력	임기
	이사장	백재현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2020.12.22. ~ 2023.12.21.
	부이사장	오언석	서울도봉구청장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배진환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당연직 (2019.11.18. ~ 2022.11.17.)
	이사	진명기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	당연직
	이사	김선조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안승대	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김기홍	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황명석	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이충우	경기 여주시장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김미경	서울 은평구청장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김재욱	경상북도 칠곡군수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유태현	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	2021.2.28. ~ 2023.2.27.
	감사	이현정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당연직
	감사	김능식	오산시 부시장	2022.2.28. ~ 2024.2.27.
주요기능	-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



## 참고 (다)

## 연구사업 추진 현황 및 2023년 추진 방향

### □ 2022년도 연구사업 추진 현황

#### ○ 국정과제, 주요 정책이슈에 관한 선도 연구 수행

－ 연구과제 99건 수행 중 (8월 말 현재 기준)

＊ 「국세의 합리적인 지방세 이양방안 검토」 등 지자체 과제 44건 수행 중

<연도별 과제수행 현황>

(단위 : 건)

구 분	계	2011 ~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 (진행)
수행과제	1,037	166	90	104	100	113	97	117	140*	110

※ 2021년은 포스트코로나 관련 소형과제 다수 수행

－ 정책변화(3.9 대선 · 6.1지방선거 등)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추진

· 「부동산 세제 쟁점 분석 및 정책제언」, 「취득세 시가인정액제도 효율적 운영방안」등

－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과제 지속 수행

※ 정책 · 수시과제 비중:(2022년 현재기준): 64건 (64.6%), (2021년) 75건(69.4%)

－ 연구센터별 수탁연구 용역 수행(5건, 32.1억원)

· 「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」, 「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 평가」, 「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」 등

#### ○ 현안분석 · 대응을 위한 공동 학술행사 및 동향보고서 발간

－ 유관기관 공동학술행사 개최를 통한 적극적 정책현안 대응

· 「새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」 등 학술행사 5회(상반기)

－ 현안 이슈에 대한 동향보고서 발간 확대

· 이슈페이퍼 TIP 16건 발간(상반기)

· 「부동산시장동향」, 「지방세판례이슈분석」 월 1회 신규 발간

#### ○ 언론홍보 강화를 통한 연구원 위상 제고

－ 언론사 공동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한 언론사 네트워크 강화

· 매일경제신문 공동 학술행사 개최(4.20), 강원도민일보 공동 학술행사 개최 예정(하반기)

－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보도 확대

· 보도자료 배포 실적: 24건(상반기), 언론보도 실적: 390건(상반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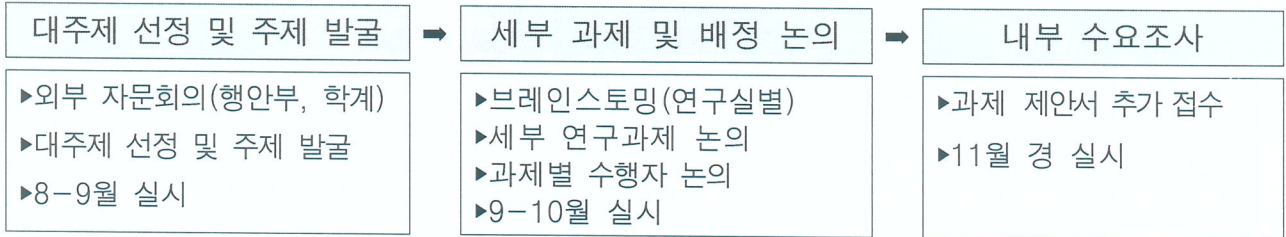
※ 전년 동기대비 보도자료 배포실적 200%, 언론보도 실적 135% 향상

## □ 2023년 연구사업 추진 방향

### ○ 중장기 지방세·재정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주제 발굴

- 내·외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실효성있는 연구주제 발굴 및 선정

<2023년도 연구주제 발굴 및 선정 절차>



### ○ 2023년도 연구과제 주제 발굴 및 과제 선정 추진 현황

날짜	내용
7.13~8.1.	연구주제 선정 기초 자료 수립
8월 중순	외부 전문가 연구 주제 제안서 수요조사 (총 56건 취합)
9월 초 경	수요기관(행안부/지자체 등) 자문회의
9월 중순	원내 브레인스토밍 및 세부과제 회의
10월 경	외부(행안부·지자체) 연구과제 제안서 수요조사
11월 경	내부 연구과제 제안서 수요조사
12월 경	내·외부 연구과제 제안서 선정

### ○ 2023년도 연구사업 추진 방향

-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연구과제 발굴
  - (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 연구) 재산세·종부세 역할 재정립 방안 등
  - (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세·재 개편) 자동차세, 디지털세, 현금성 복지사업의 지방 재정영향 분석 등
  - (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·재 재설계) 인구소멸대응기금 실효성제고, 특별자치시·도 또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지방세·재정 과제 등
- 연구센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수요 대응
  - (세법연구센터)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과제 적극 추진, 세정실무자 대상 제도개선 세미나 실시,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 정책지원
  - (세외수입연구센터)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법률 검토 및 질의 응답 등 실무 지원,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·진단 사업 고도화 (세목별·지자체 유형별 심층 분석 실시)
  - (특례연구센터) 행안부지자체가 운용 중인 특례제도 타당성 분석 및 감면 일몰/연장 평가 전문성 강화



## 참고 (라)

##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2023년 추진 방향

### 1 지방세 교육

~ 2021년 (공급자 중심) 지방세 전문 교육 시스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

#### ■ 지방세 공무원 교육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 : 총 26,316명 교육 수료

구 분	합 계	2013-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교육횟수	290	13	18	25	37	39	69	37	52
교육인원	26,316	1,781	2,101	2,571	4,827	4,312	4,400	2,784	3,540

#### ■ 체계적인 지방세 전문 교육 시스템 구축 운영

- 교육 횟수 확대 및 수요 충족을 위해 서울시립대 교육관 추가 설치 및 운영('19년)
-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온라인 교육 스튜디오 구축('20년)
- 팬데믹 장기화로 비대면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전면 전환 및 운영('21년)

2022년 (융합형)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교육 운영

#### ■ 비대면 중심 교육 강화 + 적정 규모의 대면교육 탄력적 운영

- 총 5,310명 교육 목표 / 18개 과정, 53회 교육 중 40회 교육 비대면 운영(75.5%)
-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참여도가 높은 일부 과정 대면교육 재개(6월 이후)
  - ✓ 4개 과정 총 136명 교육 : 세무조사(25명), 체납정리(56명), 미래인재(신규)(14명), 미래설계(은퇴)(41명)
- 온·오프라인 융합‘하이브리드’방식의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
  - ✓ 10월~11월 중 시범 운영 후 '23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방식 개편사항 반영

2023년 (참여형) 교육 트렌드 변화에 맞는 지방세 전문 교육기관 도약

#### ■ 지방세 실무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방식 및 과정 도입

- 교육생 수요 및 교육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형태 설계로 효과성 제고
  - 대면 : 문제해결형 참여·실습 중심(실무과제 풀이, 쟁점 토론형, 시스템 운영 요령)
  - 비대면/혼합 : 세목별 기본 이론 중심(취득세, 재산세)
- 교육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별·지역별 특화된 참여형 교육과정 신설
  - 지역별·유형별 특성에 맞는 협업기반의 분야별 맞춤형 교육 실시
    - ✓ 17개 시도 기준. 자치단체는 지역별 이슈 및 특정 분야(재개발 등) 교육 수요 모집 후 교육 요청
    - 연구원은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
#### ■ 연구원-자치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방세정 지원 다각화

- 자치단체와의 공동 연찬회 개최 및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
-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추진, 우수정책 공유 및 자치단체 협력 지속

## 2 지방세법령정보 지원

~ 2021년

(세정실무 중심) 지방세 전문 법령정보시스템 · 커뮤니티 구축

### ■ (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) 세정실무 전문자료 제공

- ('14) 「OLTA」(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) 오픈
- ('19) 「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」으로 명칭 변경
- ('21) 기능 고도화 사업(PDF·한글 다운로드,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등) 완료

### ■ (지방세 커뮤니티 구축) 세무공무원 전문 네트워크 마련

- (소통) 실무자료 공유·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공무원 마당 구축
- (정보) 지방세 전문 소식지 「지방세알림e」 발간 ('19년~'22년 총 28회)
- (참여) 활용평가대회 운영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참여도 제고  
\* ('18) 9명·900만원→('19) 12명·1,200만원→('20) 24명·2,400만원→('21) 48명·2,400만원

2022년

(실무 밀착형) 전문자료 확대 및 세정운영 적극 지원

### ■ (전문성 확대) 지방세 관련 판례 등 전문자료 등재

- (현안) 과표연구센터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 Q&A 연재
- (자료) 지방세 판례·결정례·유권해석 및 실무자료 신속 등재

구분	판례와 해석			공무원 마당		
	헌법재판소· 대법원 판례	조세심판원· 감사원 결정례	법제처· 행안부 유권해석	지방세 상담	질의 응답	실무자료 등
누적건	30,787	23,233	5,361	9,997	24,398	6,827

### ■ (세정지원 강화) 실무책자 발간 등 세정운영 적극 협력·지원

- 비과세 감면사례집·세목별 업무매뉴얼·지방세 길라잡이·다문화 안내책자 발간
- 세목별 워크숍·세미나·업무매뉴얼 등 합동작업 적극 참여·지원

2023년

(참여형) 사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유연한 운영 시스템

### ■ (참여율 제고)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DB 활용 참여율 제고

- 가입율(전국83.8%) 대비 접속율(전국48.2%) 통계 활용 적극적 홍보활동 추진
- 양질의 지방세 상담 답변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운영 체계 정립

### ■ (수요맞춤 지원) 전문자료 구축·네트워크 기능 강화

- 정기적 설문조사 및 사용자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전문자료 확대
-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「판례와 해석」연계를 통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



### 3 지방세 징송사무 지원

~ 2021년

(수동적 지원)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지원 기능 신설 및 확대

#### □(자문지원 신설)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자문지원 신설·운영

- '17년부터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지원 사업 수행
- ('18. 4.) 법령해석지원센터 신설(센터장 1, 변호사 1, 파견공무원 1)
- ('22. 1.) 징송사무부로 명칭 변경(파견공무원 2, 변호사 3)

#### □(자문지원 확대) 지방세 불복사건 서면 자문지원 및 추가 사업 추진

- 지방세 불복사건 서면지원 : '17년부터 974건 지원

합 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974건	43건	120건	279건	276건	256건

- ✓ 중요 사건 불복사건 자문회의 개최 : '19년 8회 → '20년 4회 → '21년 8회 → '22년(8월) 6회
- 불복사건 대응논리 개발 및 지자체 대응력 향상 도모
  - 자문지원 사례집 발간 : ('19년 ~ '21년) 각 40건 수록, ('22년) 30건 수록
  - 하급심 종결 판례 구축 : ('21년) 판례 1,621건 구축, ('22년) 판례 411건 구축
- 전국 단위사건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: '19년 4회, '20년 1회, '21년 2회(비대면)

2022년

(적극적 지원) 지방세 전문성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

#### □(전문성 제고) 지방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 직접 자문 확대

- 내부 전문 인력(변호사) 직접 자문비율을 점진적으로 증대, 외부 자문비율 축소
  - 직접 자문현황 : ('17년~'18년) 0%, ('19년) 9%, ('20년) 25%, ('21년) 43%
  - 직접 자문목표 : '22년 50% → '23년 60% → '24년 70% → '25년 80%

#### □(환류기능 강화) 제도개선 참여 등 행안부 협업·환류기능 강화

- 워크숍을 통한 전국단위 사건 당면 현안 대응방안 모색
- 제도개선 참여를 통한 지방세 입법예고로 불복사건 발생 가능성 차단

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/ 2 재개발·도시개발 / 3 법인 합병분할 취득유형 자문수행

2023년

(능동적 지원) 능동적·선제적 대응지원 및 정보교류 확대

#### □(선제적 대응) 수동적인 지원 ⇒ 능동적·선제적 대응 지원

- 지방세 불복사건 발생동향 수시 파악 및 연구원 자문지원 유도
- 전국단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자문지원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
  - ✓ 오프라인(워크숍·자문회의 개최) / 온라인(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징송사무 게시판)

#### □(협업·환류 강화) 지자체와 연구원간 불복사건 정보교류 채널 마련

-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내 '징송사무 자유게시판'을 신설하여 불복사건 정보교류 및 대응방안 토의, 신속한 발생동향 포착 도모

## 참고 (마)

## 관계 법령

### 【지방세기본법】

**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**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
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·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.

**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

## **【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】**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## **【지방재정법】**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